

실내수영장 격일제 운영하고... 지하수, 생수 판매 검토도

전남 지자체들 가뭄 극복 노력 보니

실내수영장 문을 일주일 4번만 열고, 비성수기 지역테마파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생수로 판매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유례 없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용하는 광역상수원(주암·장흥·수어·평립댐)이 말라가고 있어 비상시 사용하는 지역상수원인 저수지 물까지 끌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농기(6월-9월)까지 가뭄이 이어지면 농도 전남지역 지자체에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 넘는 12개 지자체가 가뭄 '경계' (심한가뭄) 단계다. 완도는 '심각' (극심한 가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안·완도·진도 3개 지자체는 비상급수(운반·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3곳의 주민에게 음용수 등을 공급하는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고, 완도 보길도·금일도, 진도 관사도 등 가뭄이 특히 심각한 지역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지자체가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광

전남 13개 시·군 경계·심각 단계
완도·신안 해수담수화 본격 추진
영암선 관정 사용한 원수 판매 모색
진도·여수, 물 절약하면 요금 감면
최악 가뭄에 지자체들 대책 안간힘

역상수원 4개 댐은 20일 기준 평균 30.2%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같은 시기의 저수율 43.9%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자체들은 비상시 사용해야 할 지역상수원(60곳)을 끌어 쓰는 상황이다. 20일 기준 전남 지역상수원의 평균 저수율은 43.5%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가뭄의 장기화에 따라 종합대책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체 관정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에 맞는 극복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군이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주일 중 화요일과 목요일, 주말에만 문을 연다. 농업용수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영장 이용에 따른 생활용수(샤워실·화장

묘수백출

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해 11월 26일부터는 해당 수영장 샤워실과 화장실에 사용하는 상수도를 종합운동장 관수용 지하수로 대체하고 있다.

비성수기에 방문객이 찾지 않는 곳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영암군은 관광지인 월출산 기잔랜드 개장 기간(7월-8월) 외에는 방문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관정을 사용한 원수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기잔랜드의 관정 5곳에서 하루 870t 가량의 청정수가 나온다는데 이를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약수터 관정 수질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야외주차장 관정을 대상으로 추가로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월께 '먹는샘물' 제조업(임시)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완벽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조사 등을 거쳐야 해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완도와 신안은 물 부족 사태를 바닷물을 정수해 사용하는 '해수담수화'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담수화는 염분과 용해물질이 많은 바닷물을 걸

러내 순도 높은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완도군은 청산면의 모도와 여서도에 각각 7억원과 1억 5000만원을 들여 담수화 시설을 설치한다.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완공되면 모도는 하루 30t, 여서도는 기존 30t에서 50t으로 증설된 양의 정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완도군의 설명이다.

신안군도 지난해 12월부터 해수담수화를 진행하고 있다. 흑산대도도와 신의면에 각각 2억원과 4억원을 들여 염분제거장치를 설치했다. 이렇게 정수되는 물은 총 400t(흑산대도도 100t, 신의면 300t)에 달한다.

개인 관정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보성군은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동울저수지(저수율 36%로 '경계' 단계)에 공급해준 주민에게는 전기요금을 대납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4개 관정에서 하루 850t에 달하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

합평군은 '저수용량 증가'를 위해 저수지의 퇴적토를 밖으로 반출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와 여수는 수도 사용 절감량에 따른 요금 감면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용량을 일정량 줄이면 그에 따라 수도요금을 일정비율 감면해줄 것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어! 물 절약 호소 문자 왜 안 오죠?

시민들 "정수장 사고 이후 조용 물 부족 문제해결된 건가요" 동북댐 저수율 문자 끊겨 의아

"동북댐 저수율이 바닥이라며 소수점까지 찍어 가면서 날마다 문자를 보내더니, 덕남정수장 밸브사고 이후 조용하네요." "동북댐 저수율 안내문자 안 오지 며칠 됐는데, 갑자기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세 달 넘는 기간동안 아침마다 울리던 동북댐 저수율 안전안내문자가 끊겼다.

광주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일 동북댐 저수율 23.56%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수율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11일에 '세대별 계량기와 밸브를 조절해 물 수압을 조정하면 효과적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이후로는 11일 동안 물 절약을 호소하는 문자를 단 한 통 발송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절약 문자를 지난해 11월 1일 동북댐 저수율이 33.4%일 때부터 발송해 왔다. 문자에는 '가뭄 심각! 동북댐 고갈 위기!' 등 문구를 비롯해 동북댐 현재 저수율과 함께 물 절약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2일 광주시 남구 덕남

정수장 밸브 고장 사고가 난 뒤 문자가 끊겼다.

이 사고로 광주시 2만 8000여 가구가 단수되고 5만 7000여의 수돗물이 유실됐는데, 조사 결과 상수도사업본부가 내구기한을 18년이 넘긴 정수장 밸브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데다 육안 점검, 외관 점검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기 실수로 물을 낭비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저수율 문자도 끊기고 물 절약하란 말도 속 들어갔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기들이 실수로 물 수천을 버리고 나니 잘못을 감추려고 문자 전송을 중단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간 물 절약에 동참해 온 시민에게 사과 문자 한 통 없고 문자 전송까지 중단하다니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덕남정수장 사고 관련 안전안내문자가 많이 발송되다 보니 시민들이 햇갈리거나 피로를 느낄 것 같아 저수율 안내 문자를 잠시 멈췄다"며 "사고 수습과 보상을 진행하고, 물 절약 문구를 고친 뒤 다시 문자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동북댐 저수율은 22.21%이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오는 5-6월께 고갈될 전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21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상자회·공로자회, 5·18 43주년행사 배제되나

광주 시민단체,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회 23일 발족

광주 시민단체는 오는 23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대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합동으로 '대국민 공동선언'을 한 것에 반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자 출범하는 기구다.

5·18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120여명은 21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대회를 열고 대책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대책위는 5·18부상자회·공로자회 임원진 등 '대국민 공동선언'을 추진한 이들에게 사과와 선언 철

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요구를 거부하면 대책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두 단체와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이며 5·18기념행사위원회와 협의해 오는 5월 예정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전야제 등에서 두 단체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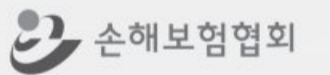
또 공동선언식에 축사를 보내거나 동조한 정치인, 기관장 등의 소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공동선언식 추진 배경과 야합, 뒷거래 정황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각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입장 표명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책위 조직 체계도 윤곽이 잡혔다. 대책위 상임대표단은 이철우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최철 5·18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정영일 옛전남도청복원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또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아 대책위 대표단을 꾸리고, 각계 원로와 학계·법조 전문가 등으로 고문단 및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홍산(사)광주전남 6월항쟁 상임이사는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명분도 없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행사를 강행했다"며 "가해자 계엄군의 사과도 반성도 없이 화해와 포용을 얘기해 5·18을 능멸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역사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